

트럼프 재집권, 中 저가공세, 고환율... 국내 정치 혼란까지

M-커버스토리

배터리·철강·석화 '고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경제적 리스크가 번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이 확보한 해외 거래선과 투자자들의 신뢰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특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외 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주요 산업의 투자 유치와 관세 완화, 기술 협력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협상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투자 계획 등을 재점검하며 만반의 조치를 기하는 모양새다.

◆ "해외사업 비중 90%"... 배터리업계, 환율 변동 리스크 커져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업종 중 하나는 배터리 산업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달러 부채로 막대한 환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업계,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 미국 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 높아 생산 다변화·미국 외 지역 투자 확대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기준 달러 부채는 약 6조 8283억원 수준이다. 전 분기 부채(4조 2179억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삼성SDI는 달러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내 미국 스텔란티스 합작공장(JV)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강달러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SK온 역시 올해 3분기 말 기준 달러 부채가 전 분기(2조 5695억원) 대비 증가한 3조 4379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내 배터리사들은 리튬, 니켈, 코발트



LG에너지솔루션·GM의 미국 합작법인 엘티엠셀즈의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등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상승은 원자재 구매 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긴급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붙잡아야 하는 데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국내 배터리사들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실적을 지탱하고 있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3사의 올 1~3분기 AMPC 누계액은 총 1조 3787억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AMPC가 없으면 영업적자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해외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사업 기반이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현지화돼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의 해외 사업 비중이 90%에 달하기에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며 "트럼프 당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철강업계, 中 저가 공세에 고환율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철강업계는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에 밀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더해져 어려움이 한층 깊어졌다. 현재 업계는 생산량 조절에 나서며 수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재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공장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산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는 지난 11월 올해 포항제철소 내 공장 2개를 폐쇄 결정한 바 있다. 현대

제철도 경북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

철강업계, 고환율로 원재료 수입 비용 ↑ 감산 조치에도 수익성 회복 어려움 정부-업계 협력 강화·신속 정책 실행

철강사들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수입 원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원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내추럴 헤지' 전략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철스크랩 등의 자급률을 높여 환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등 강달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철강업계는 이전부터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해당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석화업계, 정부 지원 기대했으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직면

석유화학업계 역시 비상계엄과 급등 중인 환율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연합 부진 장기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석화업계는 정부의 시황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금융정책 및 세무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석화업계, 환율 상승·해외 공급 과잉 기존 연합 부진 맞물린 경영 위기 비핵심 자산 매각 통한 재무 안정화

산업부는 이달 중 지원방안 발표를 예정했으나 비상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돼 지원책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는 이미 고강도 재무개선과 투자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방어적 경영에 돌입했으며, 해당 전략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석화기업들은 정부 지원책 발표를 기다리고 추가 사업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분기 적자 폭이 컸던 롯데케미칼은 재무건전성 강화, 자산 경량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 청산을 결정했고, 해외 법인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도 올해 초 여수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여수 NCC 2공장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이미 석화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이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석화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행정적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